

이재명, 민주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민생부터 저출생까지... 대권주자 면모 부각

“경제가 곧 민생... 먹사니즘 유일한 이데올로기”

민생회복·성장 비전 제시하며 수권능력 면모 부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민생·경제를 비롯해 안보, 저출생 문제,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해 당 안팎에선 “대권 도전 선언문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사당원전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재차 밝히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D)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관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임정하며 지지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주당을 국민 삶을 바꿀 ‘더 유능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준비된 정당’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 전 대표 외에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성공하면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뉴시스

도이치 공범 VIP 언급에 민주당 ‘김건희 수사’ 공세

추가조사 공범 ‘임성근 구명’ 도왔다 주변에 자랑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2차 추가조사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VIP)에게 했다’고 밝힌 녹취록을 두고 “사건의 물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간 연결 고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사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방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이모 씨가 지난해 7~8월 변호사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 문제를 두고 “절대 사보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이모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도의회 기획행정위, 서울장학숙 입사생과 소통

최형열 위원장·정종복 의원, 장학숙 자원봉사단 격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전주3, 더불어민주당)와 정종복 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익산시 일원에서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장학숙 직원들과 입사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장학숙 농촌 봉사활동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으며, 입사생들이 도민에게 받았던 따뜻한 도움과 수혜를 짧게나마 되돌려드리고자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다. 또한, 장학숙 입사생들이 사회에 정착한 뒤 고향을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 재개돼 더욱 뜻깊다. 올해 농촌 봉사활동은 9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함라면, 용포면, 용안면 일원에서 서울장학숙 입사생 41명과 직원 9명이 참여해 농작물 수확, 마을 회관 및 마을 취약공간 환경미화, 인근 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대상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 위원장과 정 의원은 익산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량이 될 입사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장학숙 관장을 역임했던 정종복 의원 또한 “인적 자원이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라며,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尹정부 전복 홀대도 지나쳐”

민주 이춘석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서

“국토부 업무보고서 ‘전복’ 단 한차례도 언급 없어 대광범·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서 의도적 배제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격분해 “전복은 버린 자식이나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을 추궁했다.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오늘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복은 물론 전복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복과 함께 소외돼왔던 강원, 제주의 사업도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복 사업만 빠진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광역철도·고속도로·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복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새만금공항만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지



역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일주일 안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복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차별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복은 사라지고 인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노골적인 ‘전복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대광범,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엔말로 국토부의 전복 홀

대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대광범 소외지역 지원 근거 신설, △초광역권과 대등한 3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부터(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4차(21~25년)에 이르는 동안 대도시권에는 177.5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특자치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초점 맞추고 있는 초광역권 조성 및 육성과정에서 3대 특별자치권이 또다시 소외되는 않는지 전복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국토부가 초광역권 육성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소외돼온 전복의 뜻을 제대로 찾겠다”며, 전복도 민 앞에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공직 청렴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는 이숙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본부 총연합이 주관하는 ‘공직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 임하면서 청렴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소속시민연대 청렴지도자 발굴위원회 추천으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이 상은 많은 공직자들이 수상을 희망하는 상으로, 우리사회의 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을 위해 마련된 상이며, 나경원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이숙자 의원은 “공직 청렴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의원으로서 보람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장 청취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전주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는 총사업비 26억1,100만원, 건물 면적 2,959㎡로 2007년 준공됐다. 물류센터에 이용하는 전체 조합원 수는 1,500여 명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로부터 민원 현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후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계자들은 “최근 대형마트 확산과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지역 내 중소 종합소매업자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물류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물류센터의 확장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최형열 위원장은 “물류센터가 개장한 후 매출 및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상품 판매 및 저장공간, 주차 공간 등 시설은 노후화되어 도내 중소 종합소매업자들의 수요에 맞는 원활한 제품공급이 어려운 점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자들과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중소 소매업자들이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며,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의무 반영

민주 박희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3개 이상 자치구 등 구성 시 인구범위 5% 내 초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인구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



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224석 중 77석(34.4%)에서 21대 253석 중 121석(47.8%), 22대 254석 중 122석(48.0%)으로 증가하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연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3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

우 인구범위(2:2) 5% 내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일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남원시의회 본회의 통과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비롯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운반·처리에 대한 운영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